

MBC 신임 감사, 방송장악 청산의 책임자 선임해야

일부 부적격 인사 반드시 걸러내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에 이어 신임 감사 선임 절차에도 착수했다. 감사 후보자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총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방문진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고, 14일 신임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는 MBC는 이제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권력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행한 방송 장악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는 작업이다. 불공정 편파·왜곡 보도와 불법 해고, 대량 징계, 부당 전보, 블랙리스트 의혹 등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적폐가 커커이 쌓여 있다. 방송법과 노동법, 국정원법 위반, 방송강령과 사규 위반, 인사권 남용, 채용 비리, 외주사에 대한 갑질 횡포 등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권한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경영 활동과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방송장악 시기 MBC의 감사 기능은 마비 상태였다. 적폐 경영진 눈치 보기,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며 온갖 의혹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의 횡령과 배임증재 의혹, MBC플러스 안광한 전 사장의 출장비 유용 의혹, 김세의 기자의 뉴스 인터뷰 조작 의혹 등 실정법이나 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안들을 모두 덮었다.

이번 감사 공모에 지원한 몇몇 인사들은 감사로서 기본적 자질과 덕목, 시대 인식 등 여러 면에서 부적격으로 보인다. 심지어 방송장악 시기 주요 보직을 맡아 공정방송 파괴에 협력한 인사도 지원했다. 방문진은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준수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MBC를 폐허로 만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선임 역시 시청자와 종사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7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